

「한국 NIH」 설립 바람직

21세기는 생명과학시대로 의과학분야의 연구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효율적인 연구투자를 위해선 연구인력의 저변확대,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조정, 최첨단분야 편중 지양, 관리의 공정성 등이 중요하다.

의 과학자(醫科學者)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의과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본다.

21세기는 생명과학시대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 의과학분야는 학문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며 장래의 국가 발전에도 절대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의과학 발전을 위하여 본격적인 연구투자를 시작한지는 불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간 우리나라 의과학계는 세계 의과학 발전의 흐름에 참여하지 못하고 옆에서 방관자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 이제 정부의 각 부처에서 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엄청난 연구비를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고 매년 그 규모가 커가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발전에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에 따라 의과학에도 전보다 연구비 혜택의 기회가 커가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막 연구투자의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구비 지급정책과 관리면의 효율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의하고

합의를 보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다음에서 몇가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을 제안해 본다.

연구인력 저변 확대해야

첫째, 연구인력의 저변확대에 아직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연구투자를 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 연구수준의 질이 국제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연구투자를 함에 있어 단기적인 승부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좋은 연구는 훌륭한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구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훌륭한 연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연구는 많은 연구자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같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측면에서 연구를 시행해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질 좋은 연구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연구인력의 절대수가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연구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지도국가가 되려면 연구자들의 수가 지금의 열배가 되어도 부족할 것이다.

현재 연구비의 지급정책은 소수 정예화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소위 SRC, ERC의 결정에서도 그간의 연구업적, 연구능력 그리고 연구의 수월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그간 연구의 기회와 혜택이 많았던 소수의 학자들이, 몇몇 우수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들이 또는 몇몇 대학의 출신들이 연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金 駟 舜

(연세대의대예방의학교실교수/전 한국기초의학협의회장)

다수의 연구인력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연구인력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소수의 우수한 연구인력들에게 투자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월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연구투자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월성만을 추구하는 정책은 아직 빠르다고 생각한다.

연구경험이 적어 연구능력이 부족한 연구자들도 앞으로 성장하여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미국은 각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수준의 평균화로 획기적인 연구업적들이 한 두 연구소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월성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이미 한분야 연구에서 우수성이 인정된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비 지급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연구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비중 일부는 지방대학에 또는 사립대학 등 연구기회가 적은 연구자들에게 정책적으로 배분하여 그들도 앞으로의 연구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과제 우선순위 조정

둘째, 연구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연구계획서는 순전히 개개 연구자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제출되며 그 계획서의 심사는 연구과제 자체

의 적절성보다는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연구자들의 연구능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비록 과거에 비하여 많은 연구비를 투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그 규모는 아직 유치원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연구에 연구비를 고르게 지급할 수 없다. 한정된 연구비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긴급한 현실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능력으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적은 연구비로도 가능한 연구분야를 사전에 정하여 연구비 지급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과제의 우선순위의 결정은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비의 심사, 지급 그리고 관리하는 위원회와는 별도로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가 있어야 하며 그 기구는 각 학문분야 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일단 연구의 우선순위가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연구계획서 심사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연구방법의 적절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의과학분야에서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원(NIH)과 같은 기구가 구성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은 연구비확보 규모나 연구비 지급의 우선순위의 결정 그리고 순수 기초과학의 육성 등과 같은 정책적인 면에서도 가장 앞서 있어 지난 50년 이래 세계 의과학분야를 지도하고 있다.

최첨단분야 편중 지양

셋째, 세계적으로 최첨단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분야의 연구만을 높이 평가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폄하해서는 안된다.

최근 미국 NIH에서 식이(食餌)에서 지방을 줄이면 혈압이 낮아지는가 하는 연구에 7백만달러의 연구비를 지급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치 분자생물학적인, 유전학적인 최첨단 연구만이, 소수의 연구자들만이 이해하는 난해한 내용의 연구만을 훌륭한 연구라고 인식하는 편견을 부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연구는 마치 열등한 연구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편견이 연구계획서 심사에 깊이 작용하고 있어 연구과제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대상 심사·관리 공평해야

넷째, 심사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더 노력해야 한다. 현재 연구비의 지급방향의 결정과 심사 관리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한 국립대학에 편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정보 또한 편중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우리나라처럼 진한 학연(學緣)으로 맺어져 있는 문화에서 사사로움이 심사결정에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한 대학 출신들이 모든 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학연이 개입할 수 없는 장치의 개발을 위해 좀더 노력을 해야 한다. 비록 늦기는 했으나 정부의 과감한 연구투자에 감사를 드리며 같은 비용으로 연구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하여 몇가지 제언을 드린다. ①